규제 완화 역주행…'손톱밑 가시' 박는 나주시

혁신도시 주택단지 6필지 모양 문제삼아 분할 승인 불허

법규에 없는 행정논리 적용 사업 지연…재량권 남용 지적

국토교통부가 단독주택 단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으나 사업 허가권을 가진 해당 지자체가 법규에 없는 행정 논리를 적용해 정부의 규제 완화조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올 1월초 침체돼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공급)사업'의 촉진을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발표·시행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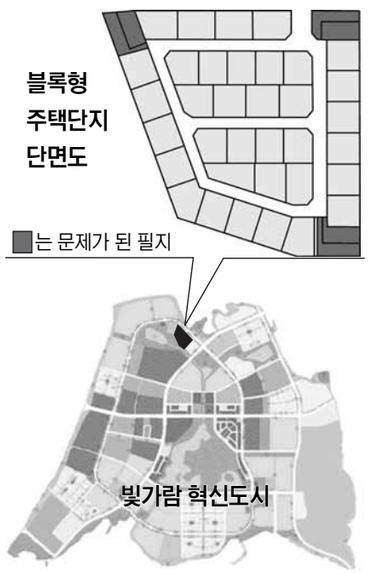
기존 지침에 따르면 블록형 단독주택 사업은 일정 규모의 블록 안에 수십 세대의 단독주택을 모두 지은 뒤에야 분양할 수 있었다. 이 방식은 사업비가 많이 투입됨에 따라 사업 기간이 길어 진행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실제 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전국 31개 지구 286필지 중 70%(197필지)가 매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을 짓지 않고도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대지조성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는 전국의 혁신도시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사업을 촉진해 혁신도시 정주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이다.

국토부의 규제완화 조치 이후 나주시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자 (주)라비뉴는 서류 접수 20일이 지나도록 나주시가 법령이 아닌 임의적인 해석을 통해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규제의 높은 벽을 절감하고 있다.

사업자측은 관련법에서 정한 대지분할 기준에 따라 혁신도시내 한전 뒤편 4570평(1만5111㎡)을 41개 필지로 분할해 최근 나주시에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했다. 이들은 대다수 필지를 86평(284㎡)에서 99평(328㎡) 규모로 분할했으나, 모서리 6개 필지는 토지 구조상 다른 필지보다 소형인 60평(200㎡) 정도로 분할했다.

나주 혁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대지조성 사업의 경우, 대지 분할 기준은 42평(140㎡)~100평(330㎡) 이하이다.



그러나 나주시는 41개 필지 중 주택용지의 세 모서리에 분할된 총 6개 필지를 재검토하라고 보완지시를 내렸다.

나주시는 주택용지 대지 여건과 인근 필지와의 조화를 고려할 경우 모서리의 분할된 60평형의 필지들은 부지 모양이 건축을 하기에 적합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토지 분할이 42평부터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60평 토지를 법률에도 없는 '모양'을 문제삼아 분할 허가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나주시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광주시 주택·건설 분야 공무원들은 분할 기준이 42평이상인 만큼 60평 규모의 분할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자측은 "나주시가 토지 모양을 문제삼는데, 분할된 60평 부지면 실내평수 30평 정도의 3층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규모"라면서 "현재 건축 흐름은 삼각형이나 요철 형태의 부지, 더구나 좁은 땅일지라도 보기 좋고 독창적인 주택형태를 지향하는 만큼 나주시의 입장은 억측이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 혁신도시에는 올 연말까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사업이 9개 단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변호사가 검사 평가…결과 공개한다

대한변협, 부당한 독주 견제

변호사들이 검사를 직접 평가해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검사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인권침해를 하지 않는지 파악해 검찰을 제어하겠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오늘부터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측은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은 폐쇄적"이라며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 때문에 피의자에게 부당한 압력·회유가 있거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검사 평가제는 형사 변호사가 온라인 설문으로 100점 만점의 평가표를 제출하면 변협이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이 자료를 인사에 참작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발의할 방침이다.

일단 이날부터 회원들로부터 올해 1~12월 형사사건 담당검사 평가표를 모은 뒤 내년 1월께 우수검사 명단을 일반에 알릴 방침이다. 하위검사는 명단 공표 대신 개인과 검찰 측에 통지하되 그 사례를 언론에 공개한다.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는 서울은 약 10명씩, 광주 등 지방은 5명 수준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사의 반대편에 선 변호사가 과연 객관적인 평가를 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변호사가 검사평가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평가도 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노강규 회장은 "일부에선 평가의 공정성 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법관 평가제처럼 결국엔 정착돼 국민 권리 보호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미세먼지 주의보…다음주초까지 계속

고농도 미세먼지가 광주·전남 전역을 둘러싸고 있어 건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는 낮은 농도에 단기간 노출돼도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돼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 20일 밤 8시를 기해 각각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 미세먼지(PM10)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이처럼 극심한 미세먼지는 다음주 초반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21일 오후 5시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00㎍/㎥(나쁨),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69㎍/㎥(나쁨)였다. 전남지역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는 각각 104㎍/㎥, 81㎍/㎥로 '나쁨' 수준이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다음주 초반(26일)까지 극심한 미세먼지가 광주·전남을 뒤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하남산단 수은 중독 호소 19명 임시 건강진단 명령

광주지방고용청

하남산단 내 조명기구 생산업체의 공장 설비 철거 근로자들의 수은 중독<광주일보 10월13일자 6면>과 관련, 광주고용노동청이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는 근로자를 포함해 모두 20여명에게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또 현장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이 업체가 수은을 땅에 매립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실태 조사에 나섰다.

21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4일과 19일 근로자 13명을 포함해 조명기구 생산업체 관계자, 하청업체 관계자 등 모두 19명에게 '임시건강진단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 2명을 포함할 경우 조명기구 생산업체의 형광램프 제조시설 철거에 참여했던 근로자와 사업주는 모두 21명에 달한다.

'임시건강진단명령'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질병이나 중독 여부를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노동청이 내릴 수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 2명 외에도 일부가 수은 중독 증상을 겪었다고 밝힘에 따라 정확한 원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라며 "철거 과정에서 하청과 재하청 등 불법이 있었고, 수은을 매립했다는 주장이 있어 관련 사실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문화재 화재 예방 훈련 광주북부소방서 소방대원들과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21일 북구 매곡동 김용학 가옥(광주시민속자료 제3호)에서 화재에 대비해 가상 진화(鎭火) 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택시·버스에 범죄실황 실시간 문자 전송

광주의 모든 택시·버스에 주요 범죄 발생 상황이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전송된다.

경찰 상황실에서 콜센터를 통해 택시·버스 기사 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 모든 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범인 검거 민·관협력 네트워크 사업'의 하나로 범죄 실황 문자메시지 전송 시스템이 개발 중이다.

택시와 버스의 카드 단말기에 수배차량·범죄 용의자 추적, 납치의심 사건 등 발생 상황을 30자 이내의 문자메시지로 알려 민관이 함께 사건 해결에 나서는 방식이다. 대상은 법인과 개인택시 8800대와 시내버스 930대다. 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28개소의 전광판, TBN광주교통방송 라디오, 대리기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발 중인 전송 시스템을 카드 단말기에 설치해 이르면 다음달 말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설치·운영은 경찰이 맡아 광주경찰청 강력계나 상황실에서 정보를 전송한다. 시는 2500만원가량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했다.

경찰은 신고·제보자에 신고 보상금과 감사장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콜택시 업체 등에 일일이 상황을 전파하고 업체에서 소속 택시에 다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 상황 전파를 일원화했다"며 "범죄발생 시 대중교통 종사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인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한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중노위 "5·18재단 계약직 2명 해고 아닌 계약 종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5·18기념재단 계약직 직원 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21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중노위는 최근 5·18기념재단 계약직 직원 2명에 대한 계약 해지는 해고가 아닌 계약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도 이들 2명의 근로계약서 등에 '재계약을 하려면 평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세부 규정이 없어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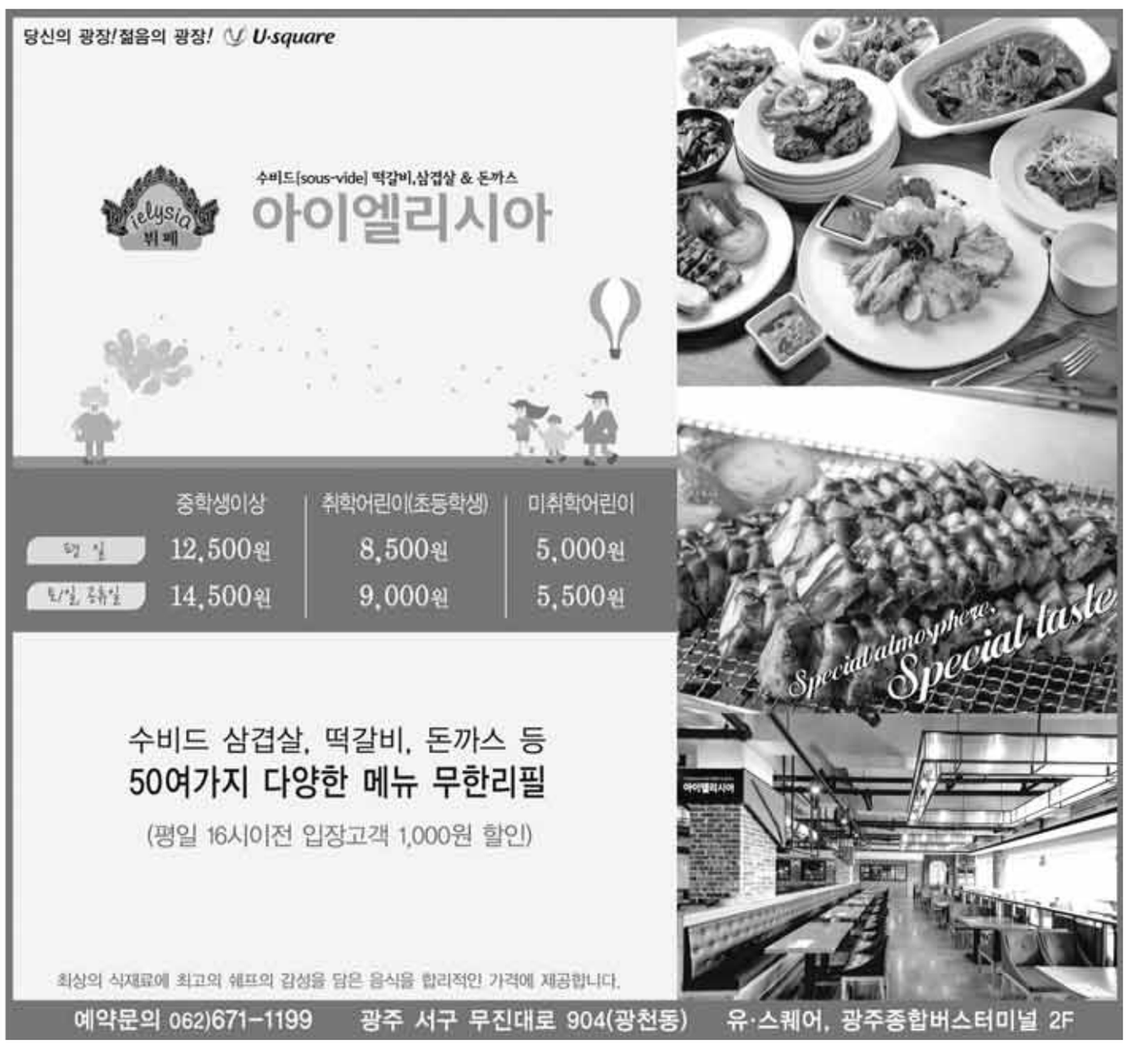
공공운수노조 5·18 기념재단지회는 중노위의 판정문을 검토한 뒤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

휴대전화 훔친 주부, 화장품가게 포인트 적립했다 덜미

쌍나팔

○…화장품을 산 뒤 다른 손님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가게를 빠져나온 30대 주부가 포인트 적립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

○…21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주부 박모(35)씨는 지난달 6일 밤 10시30분께 광산구 운남동 모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구입하고 제휴 포인트를 적립한 뒤 카운터에 놓여있던 한모(여·20)씨의 휴대전화(100만원 상당)를 조용히 들고 나왔다는 것.

○…가게 내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경찰은 용의자가 화장품 구입 당시 포인트를 적립한 사실을 파악하고, 제휴 포인트 회사(CJ-ONE)를 통해 가입자 인적 사항을 건네 받아 박씨를 검거.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